

다산포럼

일제식민지 대만과 조선의 차이



황 상 익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대만과 한국을 비교하는 연구가 늘고 있다. 식민지 시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잘 알다시피 대만과 한국은 일본 제국 주위의 경제 통치를 받은 쓰라린 경험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물론 다른 점도 적지 않다. 식민지 시기에 대한 대만인들의 평가는 한국인들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전문 연구자들도 대체로 한국인 연구자들에 비해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다. 식민지 시기를 지칭하는 용어도 대만은 '일치(日治)시기'이고 한국은 '일제강점기'이다.

직접 만나 대화를 해 본 몇몇 대만인 학자들은 나를 지나치게 민족주의적이고 '우익적'이라고 여기는 듯했다. 그들에게는 내가 민족의식 때문에 식민지 시기 일제의 통치기관이나 일본인들이 조선에서 이룬 성과들을 애써 부정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 같다. 그런 그들의 시각이 조금 섭섭하기는 하지만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두 나라의 역사적 경험과 그에 따른

日治시기와 日帝강점기

그뿐만 아니라 식민지 이전 대만인들은 중앙정부의 부당한 간섭과 억압에 저항하는 의식이 한국인들보다 훨씬 강했다. 그에 따라 일본이 대만을 청나라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켰다고 여기는 대만인들도 적지 않다. (나는 일본이 대한제국 황실과 정부로부터 자신의 고향인 평안도를 해방시켜 주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한국인은 극소수일 것이다.)

무엇보다 대만과 한국의 뚜렷하고 중요한 차이점은 식민지 이전의 근대화 경향이다. 대만은 식민지 이전 스스로 근대화를 위해 노력한 역사가 별로 없는 반면, 한국은 1870년대부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자주적인 근대국가를 세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가운데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몇 가지만 살펴보자.

19세기 후반 서유럽 선진국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장 큰 보건의료 문제 가운데 한 가지는 두창(천연두)

이었다. 두창은 이환율과 치명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더라도 마비와 골반 등 심한 후유증이 남는 무서운 병이었다.

그런 한편 18세기 말 영국인 의사 에드워드 제너가 개발한 우두술로 당시로는 거의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질병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유럽 이외의 나라들에 근대식 의료가 전파되는 데에 선봉 구실을 한 것이 우두술이다. 이러한 우두술이 대만에 체계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의 식민지가 되고 나서부터였다. 반면 한국(조선)은 1870년대부터 이재하·이현우·지석영·최창진 등 민간인들이 보급을 시작했고 1885년에는 국가사업으로 채택되었다. 1899년 3월 한국과 대만에 각각 최초의 근대식 정규 의학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 대한제국 정부가 세운 '의학교'와 대한총독부가 세운 '대만총독부 의학교'가 그것이다. 똑같은 시기에 설립되었고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학교의 성격과 설립·운영 주체는 전혀 달랐다.

빛 내 세운 '대한의원'의 허울

1905년 강제적인 을사늑약 체결 후 한국 통감으로 부임한 이토 히로부미는 다른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보건의료를 장악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에 따라 대한제국 정부가 설립한 의학교와 광제원(양한방 병용 병원) 그리고 황실이 세운 적십자병원을 통폐합하여 '대한의원'을 만들었다. 이름이 '대한'이라 자주적인 것으로 보

이지만 허울뿐이었다. 일제가 금융 분야를 장악하기 위해 만든 은행인 '한국은행'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대한제국 정부는 1년 총예산의 2퍼센트라는 거금을 일본에게 빌려서 최신식 병원 건물을 짓고 설비를 마련했다. 바로 그때 망국의 빛이 될 일본 빛을 갚으려고 민중들이 벌인 국채보상운동에서 모금한 금액의 두 배에 이르는 큰 돈을 들인 것이었다.

이렇게 세운 대한의원을 운영한 주체는 물론 일제의 지휘를 받는 일본인이었다. 대신 의학교와 광제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환자들을 진료했던 한국인 의사들은 대부분 축출되었다. 대한의원을 이용한 환자도 일본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요컨대 일제를 위한 고가의 병원을 짓기 위해 일제에 더 많은 빛을 집으려서 망국의 과정을 재촉한 셈이다. 대한의원은 1910년 조선총독부의원으로 개칭되었고 경성제국대학 의학부가 세워진 뒤에는 그 부속병원이 되었지만, 성격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일제가 한국 강점과 통치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한국의 근대적 발전이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근대식 의료와 교육의 도입을 첫손가락에 꼽았지만 실상은 이런 것이었다. 대한의원-조선총독부의원은 많은 사례 가운데 한 가지일 따름이다. 일제 식민지 대만과 조선을 비교 연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식민지 시기뿐만 아니라 그 이전 시기와 식민지화 과정도 함께 살펴야 제대로 된 비교와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NGO 칼럼

해방 69년, 아직도 떼쓰는 사람들?



이 국 인
근로청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상임대표

양금덕(86) 할머니가 초등학교 일본인 교장의 말에 속아 일본에 건너간 것이 고작 14살때였다.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중학교도 갈 수 있다"고 했지만, 막상 일본에 가 보니 전혀 딴 판이었다. 전쟁 막바지 군용 장참기를 생산하는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에서 하루 10시간에 가까운 강제노동을 해야 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도 거짓이었다. 임금 한 톨 못 받은 것은 물론, 감금이나 다름 없는 생활이다. 허기에도 시달려야 했다. 앞선 데 묘친 격으로 지전에 토레 동료 6명은 이역만리 타향에서 목숨까지 잃어 야 했고 할머니도 큰 부상을 입고 말았다. 해방 뒤 고향에 돌아왔지만 더 큰 시련

이 기다리고 있었다. 일본에 다녀왔다는 사실이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하다 온 것으로 오인됐던 것이다. 그 때문에 아버지마저 뒷방아궁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어렵게 가정을 꾸렸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일본에 다녀 온 것을 뉘는게 안 남편이 10년 간 바깥 생활을 따로 꾸렸기 때문이다. 남편이 밖에서 데려 온 아들 셋까지 떠안게 된 양 할머니는 가난과 병마에 신음하며 여섯 자식을 홀로 키워야 했다.

지난해 11월 1일 양금덕 할머니는 광주 지방법원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얻어냈다. 뒤늦게 용기를 내서 일본정부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지 14년 8개월만의 승소이자,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68년 만이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은 잠시였고, 양 할머니는 아직도 힘겹게 밤일 문턱을 넘어 다니고 있는 처지다. 미쓰비시가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기 때문이다. 다른 사건의 전례를 볼 때 광주고등법원 판결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곧바로 종료, 부족한 편의시설 등은 물건을 사는 데도 이기 때문이다. 이러다간 무덤까

지 가서 소송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요즘 문장극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의 과거 발언과 칼럼 내용이 알려지면서 연일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하는가 하면 "조선 민족의 상징은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는 것이 우리 민족의 DNA"라며 민족성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평소 우리민족을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기 좋아하는 DNA를 가진' 것으로 생각해 왔던 그의 눈에,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얼마나 불편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을까.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우리 민족의 민족성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해왔던 그에게는 어쩌면 일제 식민지배가 36년간이 아니라 한 오백년쯤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아무리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정도의 인식이라면 국무총리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으로서의 자격조차 있는지 물어야 할 처지다. 문장극 총리 지명자는 한 칼럼에서 "과

거 보상 문제는 아무리 인류 보편적 가치를 내세워도 협정을 무시하고 떼를 쓰는 꼴"이라고 했다고 한다. 혹시 일본총리가 말한 것이 아닌가 귀를 의심할 정도다. 문 후보자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발뻘할 구실만 찾고 있는 일본정부나 우익 인사들이 썩수 들고 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일협정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 사법부 판결이 내려진 사안이다. 개인 동의 없는 국가간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될 수 없다는 것과 일제 식민지배를 합법으로 보는 일본정부와 달리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비춰 일제 식민지배는 불법적인 강제점령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도 모르는 문 후보자의 눈에는 아직도 양 할머니와 같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돈 욕심에 이미 끝난 일을 두고 '떼쓰는 사람'으로만 보이는 것일까. 자신의 딸이나 어머니가 이런 일을 겪었어도 이렇게 말할 것인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69년, 아직까지 사죄 한마디 들어보지 못한 양 할머니에게는 더 없이 답답한 여름이 아닐 수 없다.

기 고

재래시장,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오 상 민
해남 화원고 3학년

시장은 생동감과 활력으로 가득 찬 곳이다. 그러나 재래시장은 큰 위기에 빠진 지 오래다. 평균 휴무일이 6일 이상 지속하는 이른바 '죽어가는 시장'이 전체의 30%다. 개점휴업 상태도 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있었다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방안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자본주의 적자생존'이라는 시장은리만이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고 활성화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재래시장의 쇠퇴 원인은 시설과 운영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시설상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시장 내부 환경이 갖는 문제다. 환풍 미비로 인한 악취, 어두운 조명, 비위생적 공간, 점포의 노후화, 부족한 편의시설 등은 물건을 사는데 불편하다.

다음은 주차장 시설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주차 면적 부족은 상권의 범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좁디좁은 주차장은 소비자가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줄이며, 대형마트와 경쟁에서 뒤처지게 한다. 더불어 매장의 전근대성도 소비자의 발길을 돌리게 한다. 가게와 가게 사이의 통로 폭이 좁아 카트를 가지고 다닐 수 없고 바다가 고르지 못해 통행에 불편하다. 여기에는 고객 편의시설도 부족하다. 냉난방 시설 및 유아 놀이시설, 휴게실 등이 없어 소비자들이 시장에 오랜 시간 동안 체류할 수 없게 만든다.

시장 운영상의 문제점도 적지 않다. 먼저, 상인의 영세한 자본력과 생업 위주의 경영은 소매 마진을 높이고 부당한 판매 가격을 설정하여 가격 표시제 실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가격 표시제 미적합은 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진다.

특히 점포마다 다른 가격 책정으로 인한 구매 혼란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어렵게 한다. 미흡한 판촉도 문제다. 전통시장에서는 전단지나 매체를 통한 광고를 찾아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생계 유지 위주의 재래시장에서 상인은 다양한 할인 행사 및 경품 행사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전남과 광주의 성공적인 재래시장 운영 사례를 직접 조사하면서 해결 방안에 대한 답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었다. 목표 청호시장의 경우 입구에서부터 대형 주차장을 찾아 볼 수 있었다. 또한, 시장 입구의 안내 표지판은 구입하고자 하는 품목을 파는 점포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해주었다. 여기에 가구시장을 특화해 혼수 전문시장으로 탈바꿈할 계획을 세우는 등 특화된 시장 이미지 확보에 주력하고 있었다.

정남진 장흥도요시장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총 75억 원이라는 많은 지원을 받아 공연장, 워터, 특산물 판매장 등 다양한 소비자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광주 양동시장은 같은 업종별 집적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 활용이 뛰어나며 특화된 상품화가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신용카드 거래 활성화를 통해 현대인들의 소비양식을 받아들이고, 통일된 간판이 시각적으로 큰 효과를 내면서 시장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었다. 광주 대인시장은 현대화된 천정과 세련된 간판, 그리고 지역 축제와 연계해 예술의 공간과 문화를 마련하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는 점이 인상 깊은 곳이었다. 이와 함께 쇼핑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쇼핑카트를 대여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점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으며, 인기시장으로 자리 잡게 하였다.

이 같은 성공 사례를 통해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인들의 서비스 마인드 개선과 교육을 통한 인식 전환,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 지역 주민들의 재래시장 상품 구매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거대 대형마트와 할인점에 의해 지역 상권이 잠식돼 가는 가운데서도 재래시장을 지역사회의 만남의 공간으로, 그리고 지역 자원의 내부 순환을 위한 상업 경제의 뒷받침으로 지켜 가려는 노력이 여러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역발전은 삶의 터전을 스스로 지키려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창의적 노력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이어져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社 說

세월호 두 달...여객선 안전 달라진 게 없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새 두 달이 됐다. 사고 이후 '안전'이 전 국민 의 화두가 되면서 지방선거에서도 관련 공약이 홍수를 이뤘다. '모든 것을 바꾸자'고 외쳐 온 2개월, 우리 사회의 안전 문화는 얼마나 개선됐을까. 안타깝게도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는 게 종론이다.

안전불감증은 광주일보의 여객선 운항관리에 대한 현장 취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본보 기자가 지난 14일 목포 북항선착장에서 목포와 신안 비공도를 오가는 연안 여객선에 올라 지켜 본 선사사 승무원 그리고 감독기관의 행태는 안일하기 짝이 없었다.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은 문이 활짝 열린 선원실에서 화물차주로 보이는 탑승객과 뒤섞여 화투 놀이에 여념이 없었다. 운항 중 선내를 돌며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살펴보는 승무원은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선원실에서 화투 판이 벌어지는 것을 이전에도 늘 보아 왔다는 게 승객들의 전언이다.

윤장현 당선자 '투명 인사' 초심 잊지 말아야

인사는 만사다. 광주 시민과 공직자들은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에게 합리적 인사를 기대하고 있다. 마침 윤 당선자가 '투명 인사'를 다짐했다. 임기를 마칠 때까지 그의 공언이 반드시 지켜지기를 바란다.

"투명한 인사 시스템으로 철저한 검증을 거쳐 공직자 역량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 윤 당선자의 말이다. 이전 시장들도 다 임기 초에 비슷한 말을 했지만 제대로 지켜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만큼은 유달리 기대가 크다. 그것은 윤 당선자가 공정성과 합리적 명분을 최우선시하는 시민단체 출신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는 특히 "친소 관계에 따라 정실 인사를 부탁하는 등 잡음이 있는 경우는 철저히 배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개인 동의 없는 국가간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될 수 없다는 것과 일제 식민지배는 불법적인 강제점령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도 모르는 문 후보자의 눈에는 아직도 양 할머니와 같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돈 욕심에 이미 끝난 일을 두고 '떼쓰는 사람'으로만 보이는 것일까. 자신의 딸이나 어머니가 이런 일을 겪었어도 이렇게 말할 것인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69년, 아직까지 사죄 한마디 들어보지 못한 양 할머니에게는 더 없이 답답한 여름이 아닐 수 없다.

가치가 될 정도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탁구공만한 크기의 볼품없는 사고 모양에 소비자들의 첫 반응은 실망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소비자로부터 "이렇게 맛있는 사고는 처음 먹어 봤습니다"라고 쓰인 편지를 받는다. 또 유명 레스토랑 주방에서는 2년이나 보관해도 썩지 않는다고 했다. 그 사고로 만든 수프가 달콤한 향을 뿜어내자 이육고 '기적의 사고'라는 이름까지 얻게 된다.

전남 지역에서 자연농법에 도전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다. 장성에서는 기무라 식으로 사과를 재배하고 있고, 고흥 등지에서는 벼농사에도 자연농법을 도입했다. 화학비료와 농약을 물론 퇴비까지 사용하지 않고 토양을 자연 상태로 가깝게 만들어 벼농사를 짓는 것이다.

이런 농법으로 재배한 쌀은 세포가 단단해 기준 쌀에 비해 부패가 잘 되지 않고 인체에 좋은 영양을 공급해 준다 고 한다. 아무쪼록 쌀 시장 개방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치한 쌀 재배 농가들에게 새로운 '블루오션'이 됐으면 싶다. /송기동사회2부장 song@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칭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